

새로운 북한 통계와 미래 연구방향

고명현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goskooby@gmail.com

북한 연구를 하게 되면 생기는 딜레마가 있다. 바로 연구대상인 북한에 가볼 수도 없고, 북한 학자와의 직접 교류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특히 연구자의 국적이 한국일 경우 어려움은 더욱 심각해진다. 물론 외국 연구자에 비해 언어와 문화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러나 직접적 데이터의 부재는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랫동안 계속된 정량적 데이터의 부재가 아무래도 북한 연구를 정성적 데이터 기반 연구로 쏠리도록 한 것이 아닐까 한다. 따라서 1990년대부터 꾸준히 늘기 시작한 북한 관련 통계는 폐쇄사회인 북한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1990년대 이후 북한경제가 무너지고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유엔세계식량계획(WFP), 유엔아동기금(UNICEF)과 같은 국제기구들이 북한 내부에서 활동하면서 정량적 데이터가 축적되기 시작하였다. 북한 정권이 이들 기구들과 공동으로 인구조사부터 식량실태 등 현지조사를 진행하면서 북한에 대한 사회과학적·인구학적 데이터가 수집되었다. 다만, 국제기구 자체에서 진행된 조사가 아니라 북한 당국이 용역을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신뢰도의 문제가 있으나, 이전 북한의 공식 데이터가 오류가 가득하고 그나마도 접근이 어려웠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고무적인 변화였다.

국제기구의 정량적 데이터와 더불어 중국정부의 공식 무역 데이터가 있다. 흔히 거울통계(mirror statistics)라고 불리는 이 통계는 대외무역의 90%를 중국에 의존하는 북한경제를 속속히 들여다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통계이다. 중국 세관 통계보다 덜 알려져 있지만 중국국가여유국의 국가별 출입국 통계도 북한과 중국 간의 인적 왕래 통계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경제상태, 대외의존도, 그리고 사회변화까지 유추하는 데 유용하다. 중국 당국의 통계 조작에 대한 의구심이 없는 것은 아니나 전체적 추세를 가늠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한 직접적 정보의 원천은 국내에 있는 탈북자 인구이다. 1990년 북한경제 붕괴는 대량 아사사태를 야기했고 수십만의 북한 주민이 식량을 찾아 중국으로 월경하는 인도적 재난으로 연결되었다. 그중 일부는 1990년대 말부터 한국에 입국하기 시작하였다. 2016년 말 3만명에 육박한 탈북자들은 오랫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북한사회 내부를 볼 수 있는 정보 원천이다. 소수의 특권층이나 군인이던 이전 탈북자(귀순자)들과는 달리 2000년대 탈북자들은 정치적 배경이 없는 주민들이 다수이다. 따라서 북한 내부 실태에 대한 그들의 증언은 좀 더 신뢰성이 있었고, 이들을 통해 그 존재가 불투명하던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도 확인되는 등 북한에 대한 전반적 이해도가 높아졌다.

이 뿐만이 아니다. 1990년부터 시작된 정보기술혁명은 북한 관련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대표적인 것으로 구글 어스(Google Earth)와 같은 인터넷 기반 화상데이터 서비스이다. 무료인데도 불구하고 구글 어스가 제공하는 높은 해상도의 이미지를 통해 북한 장마당의 확산을 관측할 수 있고, 정치범 수용소를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는 안보 당국자들에게만 제공되었던 인공위성 사진들을 통한 분석과 별반 차이가 없다. 덕분에 북한 연구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또한 상당히 낮아졌다.

이러한 변화 덕분에 일반 연구자가 접근할 수 있는 통계의 종류와 양은 1980~90년대에 비해 월등히 많아졌다. 하지만 새롭게 등장한 데이터들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사회, 경제, 인구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이 아닌 대용지표(proxy indicator)라는 데 그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경제분야 중 대외분야와 농업분야는 중국 측의 거울통계와 북한에서 활동하는 국제기구들의 조사 덕분에 상당히 정확한 통계가 집계되고 있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더욱 중요한, 국가경제통계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GDP는 아직까지도 추정치일 뿐이다. 대북정책을 성립하는 데 중요한 북한의 에너지부분과 산업생산에 대한 통계도 마찬가지이다.

간접적 통계로 인한 분석의 한계는 인공위성을 통한 데이터는 말할 것도 없고 탈북자 면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에도 분명히 존재한다. 3만명 탈북자의 80% 가량이 함경북도와 양강도 단 두 개 지역 출신이며, 70% 이상이 여성이다. 이러한 지리적·인구학적 편향성 때문에 탈북자를 통해 북한 전역의 변화를 감지하고 정량화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안타깝지만 북한이 개방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상황이 가까운 시일 내로 개선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현시점에서 북한 통계는 방대하지만 얕다고 할 수 있다(broad but shallow). 따라서 정량적 데이터의 개발과 심도화도 중요하지만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상호 이질적인

여러 통계들을 잘 통섭하여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정량적 데이터뿐만 아니라 정성적 데이터도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제 대용 통계이긴 하지만 북한과 관련된 직·간접적 데이터는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 연구의 가장 큰 도전은 데이터 확보보다는 정확한 연구목적에 정하는 것에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측면에서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통계영역을 한반도에 국한하지 말고 외부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예로 북한과 연 1억달러 가량의 거래를 하던 중국의 라오닝 홍상 그룹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의해 금지된 이중용도 물자를 북한에 수출했다는 증거는 국내외 정보기관이 아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세계 무역거래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왔다. 유령회사(Shell company)를 통해 국제사회의 감시를 회피하는 북한의 대외무역 전략은 홍콩의 사업자 등록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어렵지 않게 인지할 수 있다. 결국 오늘날 북한 연구자들이 당면한 숙제는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직접지표 데이터를 대신할 수밖에 없는 이질적이고 방대한 양의 간접지표 통계들을 어떻게 구성해서 활용하는가이다. 인공위성 사진, 홍콩의 사업자 등록 데이터베이스, 중국의 기업정보는 이미 존재하고 연구자들이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국내 북한 연구자들은 북한 내부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해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향후 학문적 발전은 신뢰도 높은 정량적 데이터 확보 없이는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이 부분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북한이 대폭 개방하기 전까지는 요원해 보인다. 결국 북한 연구의 향후 도전은 연구자의 창의력을 바탕으로 방대하고 즉시 접근 가능하지만 상호 이질적인 통계들을 연결하여 북한 정권이 과연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더욱 중요하게는 북한의 장기적 정책의 방향성이 무엇인가를 유추하는 것이다.